

(토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김 종 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사자조직, 도, 중간지원조직, 의회, 언론 등 간의 연계와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언어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어를 맞추는 점은 말 그대로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 표현 방식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책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안이 있어도 관의 방식과 언어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해시키거나 추진되기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들이 안을 가지고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의 동력을 끌어내려고 할 때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업을 끌어내기 어렵다. 이렇게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상호이해와 배려가 기본이다.

민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민에서 추진하려는 사업들을 잘 모아내고 이를 표현을 잘 해내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거나 문서화 하는 작업이 서투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돕고 거들어서 정책화하는데 반영시켜야 한다.

충남도 경우 그동안 도의회와의 협력이 미미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또한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초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경제를 서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

중간지원조직은 이러한 각 주체들 간의 언어를 맞추고 조금씩 다른 이해관계를 통역해주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이후 준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기본법 내용을 잘 설명하고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민의 협력을 끌어낼 때 서로의 자원과 힘, 지혜를 모아내야 한다.

이렇게 중간지원조직은 민과 관을 연계하는 것과 더불어 민과 민과의 연계 또한 고민해야 한다. 또한 광역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시군들 간의 소통을 유도하고 상호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시군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역량을 끌

어낼 수 있는 시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발제문에 제시되어 있듯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 시대에서 새롭게 배제된 사람들과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 속에서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도민들에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모든 일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플랫폼이 되어 정보와 인재, 자원을 필요한 곳에 연계해주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남도에서 새롭게 배제된 이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역할을 줄 것인가와(신용창출), 지역의 현안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협력을 끌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본법 이후 충남도에서 당장 집중해야 할 일은 기금형성 등 지역의 자립과 자급을 돕는 일이다. 관의 자원과 사업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의존하게 되면 민 스스로의 자원을 내어놓고 모으거나 주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연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의 입장에서 민이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스스로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도울 필요가 있다(그래서 기금 관련해서는 실제로 전문가들을 모아 연구회를 시작하고 내년엔 민간 스스로 활동을 먼저 시작하도록 도울 것임).

충남도가 사회적경제 복합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미 구성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군별, 업종별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중첩적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과정이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는 당사자를 넘어 지역의 다양한 영역과의 이종교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이미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로터리클럽 등 지역단체들, 시민사회 영역, 노동조합 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퀘백에서 기금이 초기에 탄실하게 시작된 것은 시민사회 영역과 노동조합이 힘을 보태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함).